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5

행정안전부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5

목 차

Ⅰ.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혁신 02

Ⅱ. 정부혁신 추진 3년, 긍정적인 변화 05

1.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06
2. 국민 목소리를 예산 수립·집행에 직접 반영합니다. 08
3.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09
4.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0
5.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제공하였습니다. 11
6. 모바일과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
7. 관할을 넘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3
8.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포용적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14
9.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합니다. 15
10.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16
11. 필수 현장공무원 확충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17
12. 여성·장애인 등 공공부문 인사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8

Ⅲ. 향후 정부혁신 추진방향 19

[참고] 1.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 추진경과 22

2. 2020년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23

3. 카드뉴스로 본 문재인정부 3년 간의 정부혁신 성과 24

I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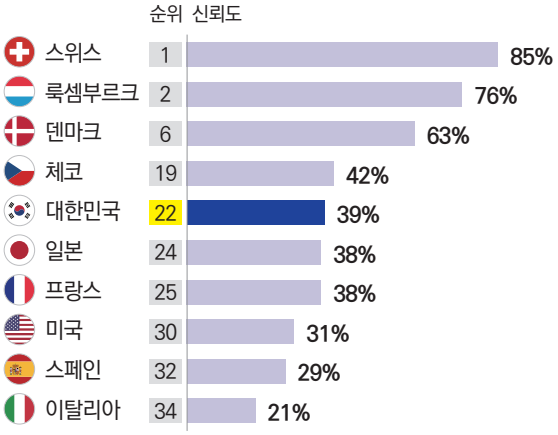
Ⅰ 국제사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정부혁신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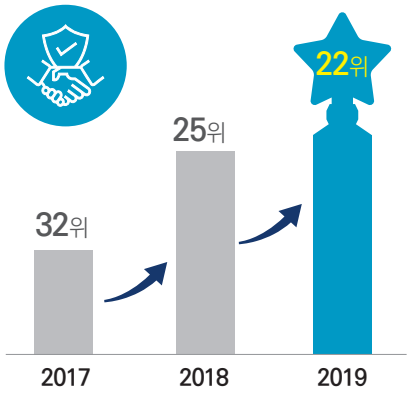
"OECD 정부신뢰도 역대 최고"

● 주요 선진국인 미국·일본·프랑스 보다 높은 정부신뢰도 수준

〈 2019년도 OECD 주요국가 정부신뢰도 순위 〉



〈 OECD 정부신뢰도 순위 〉



※ 출처 : OECD World Gallup P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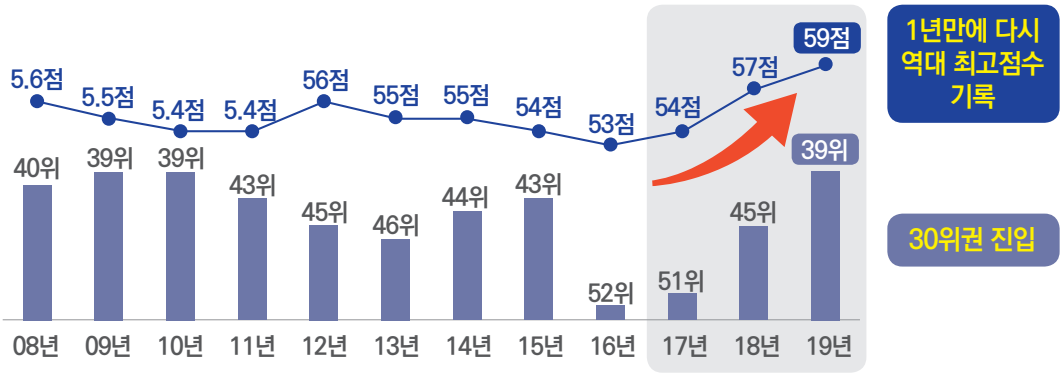
▸ 'K-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성공적인 대처의 결과로 에델만에서 조사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해 1월(51%)보다 16%p 상승한 67%로 나타나,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역대 최고치 기록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기업 '에델만' 정부신뢰도 조사(4.15.~23.간 국민 1,200명 대상)(5.10. 발표)

■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도약

"부패인식지수(CPI) 3년 연속 상승"

● '17년 대비 12단계 상승하여 10년 만에 세계 30위권으로 재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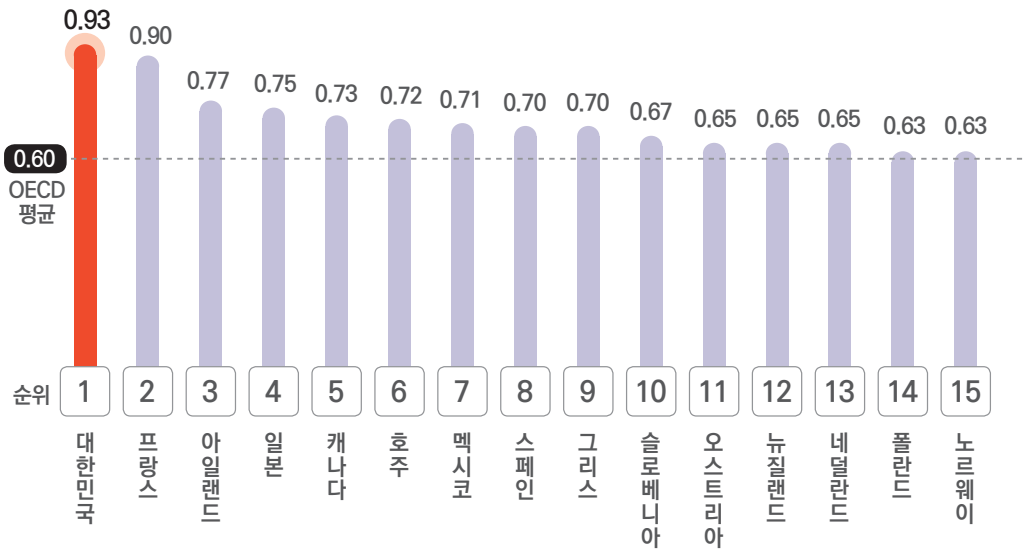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19년 공공청렴지수(IPI)에서도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아시아 국가 1위)로 '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격년 측정), '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평가

■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

“OECD 공공데이터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구현 수준, OECD 최고 선두주자(Frontrunner)” (’19.11.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9」)

〈 OECD 공공데이터 평가 종합 순위 〉 OECD OURdata Index 2019



■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열린정부 분야 리더십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수임”

- ’11년 OGP 가입 후 초기 소극적 참여로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촛불혁명 등 민주주의 성과,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높이 평가

> “대한민국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혁명 이후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문을 국민에게 열어 왔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시민사회의장과 함께 시민영역을 보호·확대하고, 포용사회를 구축하며, 정부혁신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
> – 산자이 프라드한(Sanjay Pradhan) OGP 사무총장

※ OGP는 국제사회의 투명성 제고,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협의체

*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79개국 및 20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고, 국제투명성기구 포함한 천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II

정부혁신 추진 3년, 긍정적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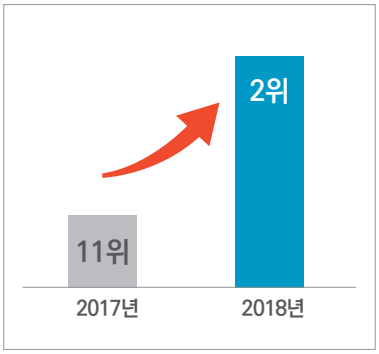
1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확대하였습니다.

■ OECD '시민참여 지표', 획기적으로 개선

OECD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 (BLI, Better Life Index) 중 '시민참여 지표'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며 공동체의 웰빙을 결정하는 논의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

- '17년 11위 → '18년 2위(전체 40개국 中)



■ 폭넓은 국민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를 다양하게 마련

-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 다수가 요청한(30일간 20만 명 이상 동의) 국정 현안에 대해 정부·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

  ※ (사례) 아이돌봄 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영유아 폭행 시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 국민청원(~'20.4.30.) : 82만 6,156건 청원(일평균 837건), 동의 1억 3,635만 건

-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광화문1번가' 및 '국민신문고' 활성화

  ※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 494건(현장포럼 132건, 온라인 플랫폼 362건)
  국민신문고 제안 : '18년 10만8천건 → '19년 11만1천건

- 식품·의약품 대상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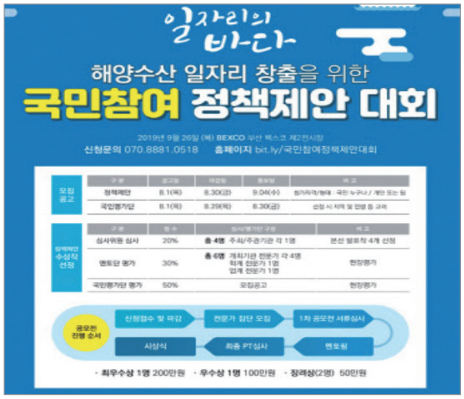
  ※ '18.4. 제도 시행 후 '19.12.까지 63만명 방문, 1,065건 청원 제기,
  물휴지·기저귀 등 8개 품목에 대해 검사 실시 → 품목별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 국민참여의 질적 수준 향상

● 국민참여 정부조직 진단,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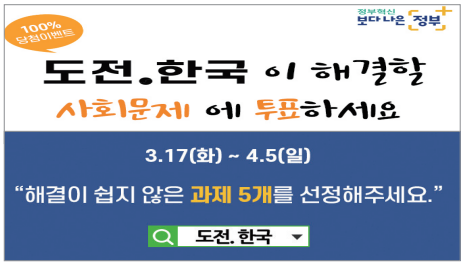
※ 조직·법령 등 정부 내부 핵심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정책평가 등 정부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추천·심사 비중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전.한국'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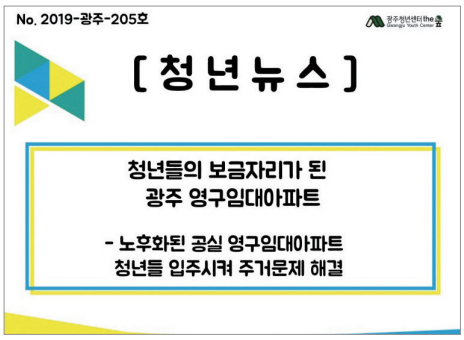
※ 일반적 공모전과 차별화하여 △ 도전적 문제 발굴 △ 과감한 보상과 후속지원 △ 확실한 정책화 추진



■ 지역주민 중심의 문제해결 거버넌스 구조 마련

● 시민사회·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확대

※ 대표 사례 :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공실을 이용하여 청년 주거문제해결과 활동거점 지원(광주)



● 주민 대표기구이자 민관협치 기구로서 '주민자치회' 확산

※ 기존 47개 → '19년 말 40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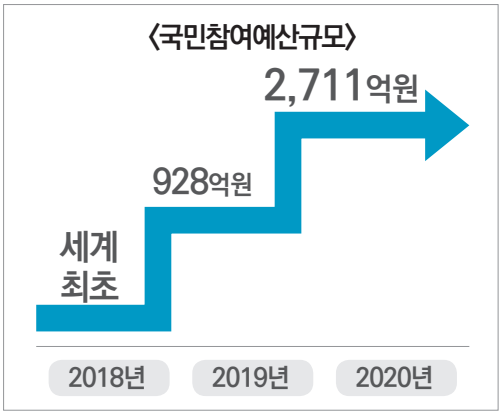
※ 대표 사례 : 주민참여단이 발굴한 의견을 마을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최종 의제로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계(광주 광산구)

2 국민 목소리를 예산 수립·집행에 직접 반영합니다.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세계 최초 중앙정부 단위의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예산국민참여단을 중심으로 숙성
- 사업제안기간 상시화 (1개월 → 연중), 사업제안 범위* 확대
  * 신규사업 → 기존사업 개선방안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

〈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사업 발굴 〉


군장병 패딩 보급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 내 삶을 바꾸는 자치의 출발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활성화

- 모든 예산과정으로 주민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기구 근거 마련 ('18.3. 「지방재정법」 개정)

※ (사례) 강원 춘천시 '버스노선 안내원 사업'(370백만원) : 관내 관광 프로그램 및 각종 시설 이용편의 안내 등을 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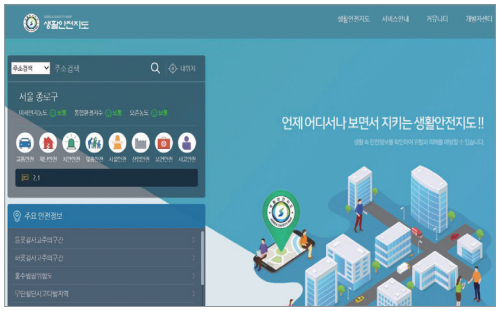
3 국민 관심 정보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안전·건강·예산집행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안전, 건강 등 국민 관심정보 집중 공개

- 재난, 교통, 치안 등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 공개 확대(4대→8대 분야)

  ※ 8대 분야 : 교통, 치안, 재난, 시설, 산업, 보건, 사고, 취약계층



-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공개하는 "초록누리" 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해소에 기여



- 분산된 보육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 등) 정보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에서 통합 제공

  ※ 공개정보 : 상호명·위치·이용가격·평가정보 등



■ 핵심 예산집행 정보의 통합 비교·공개

- 기존 장차관 외 실국장까지 업무 추진비 공개 확대
- 국외 출장 건별로 운임, 체재비 등 국외 출장 여비 공개
-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복지비 공개



4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혁신 성장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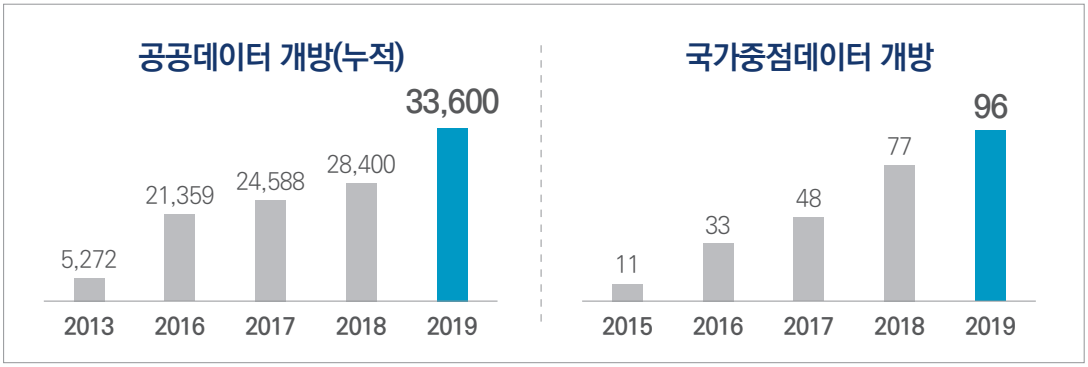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 지속적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 : ('13년) 5,272개 → ('18년) 28,400개 → ('19년) 33,600개

- 국민 수요와 민간 활용성이 높은 금융종합정보, 다중시설 실내 공기질 등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 ('15년) 11개 → ('16년) 22개 → ('17년) 15개 → ('18년) 29개 → ('19년) 19개



■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및 창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

〈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

- **다방** : 전국 아파트 전월세, 오피스텔 매매 신고 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 제공
- **화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성분 정보 및 제조판매 정보 등을 활용하여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 유해정도 등 안내



〈 다방 〉

- **코로나맵** :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이 하루만에 '코로나맵' 제작 및 무료 배포
- **공적 마스크앱**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주도로 '공적 마스크앱' 개발


〈 코로나 맵 〉

5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고 제공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일일이 찾아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온라인 서비스 시행('17.11.), 아동수당 등 통합신청 항목 추가 / 이용률 99.4%

- 상속인이 금융·토지 등 사망자의 재산(11종)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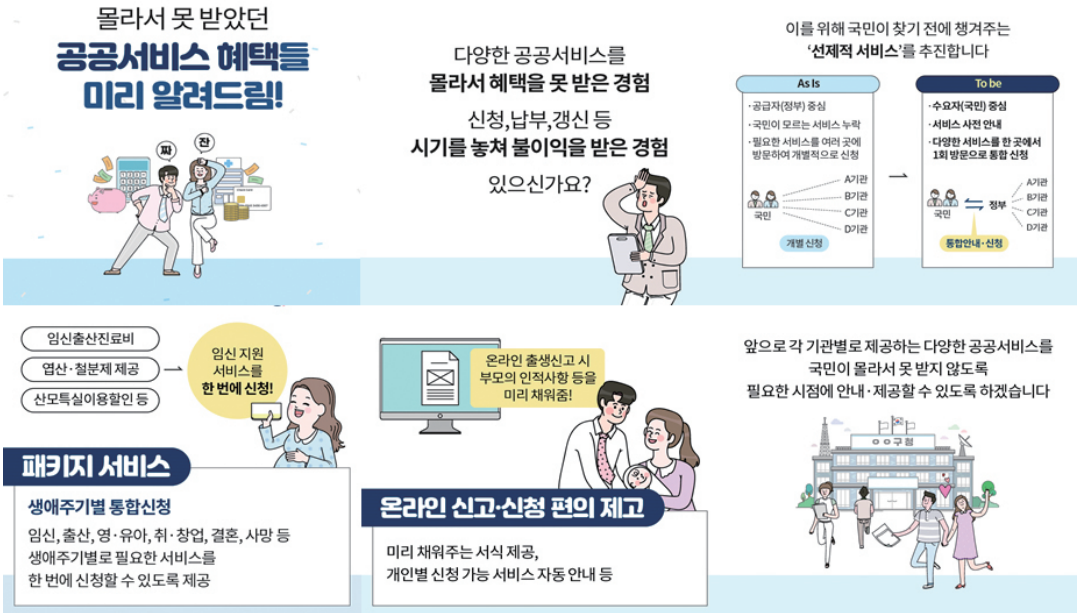
  ※ 건축물 소유여부 등 통합신청 항목 추가('17년 7개 → '19년 11개) / 이용률 ↑ ('18년 50.4% → '19년 56.6%)

■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지속 발굴·확대

- '전입', '임신', '돌봄' 단계의 원스톱 서비스 3종 도입 추진

  - 전입플러스 : 전입신고와 동시에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혜택을 원스톱으로 신청('20.4. 개시)
  - 맘편한임신 : 엽산제·철분제, 진료비 지원 등 임신지원 서비스 14종 연계('20.6. 시범사업)
  - 온종일돌봄 :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4종 연계('20.6. 시범사업)

- 취업·창업·주거·재기지원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22년까지 전 생애주기(11종 이상)로 확대



6 모바일과 디지털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모바일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전자증명서 확대 및 민간 활용 활성화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확대

  ※ ('19년) 주민등록등·초본 → ('20년말)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 ('21년말) 인감증명서 등 300종

- 계좌개설, 은행대출 등 생활 속 체감도 높은 금융기관 우선 적용

  ※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 시 가족관계 확인,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본인확인 등에도 활용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과태료 한 번에 확인·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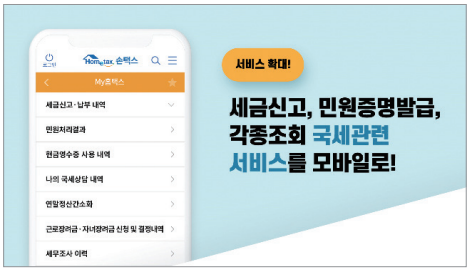
-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페이코·앱카드 등)으로 고지서 확인·납부

  ※ 이용실적 : ('18년) 488만 건 → ('19년) 658만 건

■ 모바일 홈택스로 쉽고 빠른 국세 서비스 제공

- 손쉬운 연말정산과 간편한 세금신고·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언제 어디서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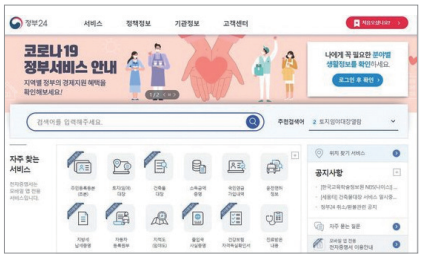
  ※ '19년 연말정산 63만 건, 부가세·소득세 신고납부 14만 건, 근로장려금 신청 152만 건



7 관할을 넘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기관이나 지역 구분 없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서비스를 통합하였습니다.

■ 정부대표 온라인 플랫폼 「정부24」개통



- 각종 증명서 발급, 기관별 주요 서비스·정책정보 연계 제공
- '나의 생활정보',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정부서비스 9만여 종 안내, 1천여 종 신청·발급 / '18~'20년 282종 추가 연계
-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책정보 서비스'('18년 4개→'20년 105개 사이트)

■ 칸막이 없는 통합 민원창구 마련



- 일반·다부처·고충 민원 등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19.10.)
- 국세·지방세 구분 없이 세금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 ('18년) 2곳 → ('19년) 21곳
- 민원상담부터 접수·처리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민원창구' 확대

  ※ ('17년) 157개 → ('18년) 180개 → ('19년) 185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

〈 대표사례 : 충남 태안군 〉

- 신속민원처리과를 설치하여 건축, 부동산, 개발행위 등 다양한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 ('19.1.~9.) 동안 52종 민원 총 4,171건 처리 / 평균 처리기간 단축률 46.8%

8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포용적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효율과 성장이란 가치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체 이익도 중시하는 국정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초등학교 주변 보도·보행로 설치(총 848개소)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초등학교(6,083개소) 주변 '보도 없는' 도로 전수조사('18.5.) 결과,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34개소(전체 초등학교의 30%)

-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 확대



■ 어르신 돌봄 강화로 건강한 노후 보장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등 6종의 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19년 35만명 → '20년 45만명)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복지 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로 '19년 6,500명이 활용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확대 제공(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까지 확대,'19.8.)

9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합니다.

연간 120조 원의 공공 구매력으로 혁신 기술·제품을 구입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 기업을 지원합니다.

■ 공공조달에 혁신제품 마중물 역할 부여

- 정부의 구매력('18년 123조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공공조달제도 혁신
- 공공부문이 창업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신시장 창출 등을 지원

■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기술 혁신 지원

- 기관 물품구매 예산의 1%를 혁신제품으로 의무 구입하는 '혁신제품구매목표제' 시행
-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실시

  ※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주요 혁신성장 분야 중심
- 혁신제품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위한 '혁신조달 플랫폼' 개통('20.2.)

〈 혁신 시제품 구매 사례 〉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용 스마트 음압 모듈

  ※ 6개 군병원에 설치·테스트 중



10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공직문화로 정착시켰습니다.

국민의 삶과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보다 창의적,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제도화하고 장려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삶과 경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 발상으로 해소하는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19.2.12. 국무회의)



■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의 적극행정 실천

- 통상 80일 이상 소요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허가를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7일 만에 승인
- 의학계 제안을 발전시킨 '승차 진료(Drive-Thru)' 도입 등 혁신적 검사방식의 신속한 가동과 전국 확산
- 병실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 '생활치료센터' 도입을 위한 법개정 전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 등 허용
- 마스크, 소독제 등 제한된 방역물품의 공급체계를 적극적·선제적으로 개선

  * (예) 손소독제 원료인 공업용 주정이 수급 부족에 시달리자 주세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주류용 주정'을 방역에 활용(국세청)





■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마련('19.8.)
- 전체 중앙행정기관 대상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 중앙·지자체 사전컨설팅 건수 : ('18년) 679건, ('19.10월 기준) 982건

〈 사전컨설팅 사례 〉

국내 공급이 중단될 뻔한 안과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면책을 인정받고 신속히 조치하여 공급 유지(복지부)

- **사전컨설팅 제도란?**
  업무 처리 전에 미리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시 면책해 주는 제도


"실명예방주사 퇴장만은 막자"...기준까지 바꾼 '적극행정'

최은택 | 승인 2019.10.18 06:08 | 댓글 0

복지부, 감사원 사전컨설팅 활용...제약·도매도 팔걷어

차관회의서 '미토마이신씨 공급유지' 우수사례 발표
생산·유나이티드제약, 유통·B&C메디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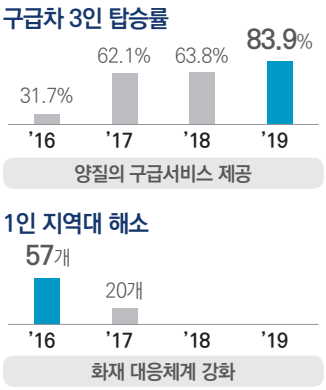
사건이 발생한 건 올해 1월이었다. 한국교와하코기린이 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미토마이신씨교와10mg' 주사 공급 중단을 식약처에 보고한 것이다. 이 약제는 실명예방에 쓰이는 데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이어서 공급 중단될 경우 특히 녹내장 등 안과수술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11 필수 현장공무원 확충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입니다.

소방, 경찰, 교원 등 민생 현장에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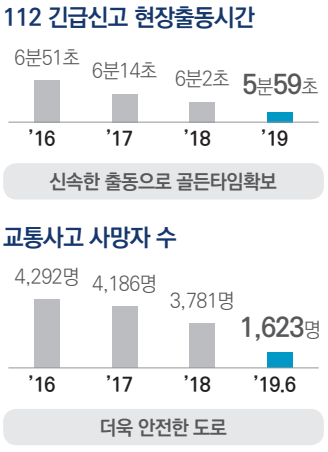
■ [소방] 긴급구조 및 화재·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 구급차 3인 탑승률 52.2%p 상승
  * '16년 31.7% → '19년 83.9%('16년→'19년 52.2%p ↑)
- 단독 화재진화하는 '나홀로 소방대' 해소
  * '16년 57개소 → '18년 12월 이후 0개소 ('16년→'19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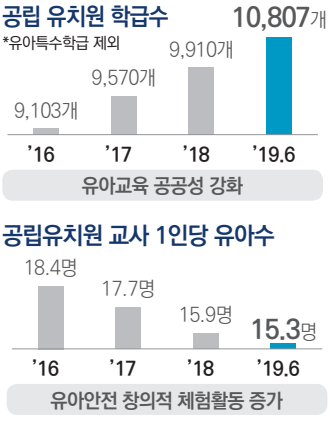
■ [치안] 위기상황 및 강력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확보

- 112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 12.7% 단축
  * '16년 6분51초 → '19년 5분59초
-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의 검거율1.1%p 향상
  *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 '16년 53.6만건 → '19년 50.7만건



■ [교육] 공교육의 만족도와 품질 제고

-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학급도 늘린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 16.8% 감소 ('16년 18.4명 → '19년 15.3명)
  * 유치원 : '16년 305개 → '19년 6월 403개 (32.1% ↑)
  * 학급수 : '16년 9,103개 → '19년 6월 10,807개 (18.7% ↑, 특수학급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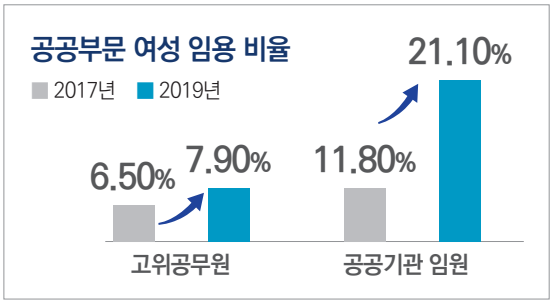


12 여성·장애인 등 공공부문 인사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직 내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의 채용을 늘려 인사 다양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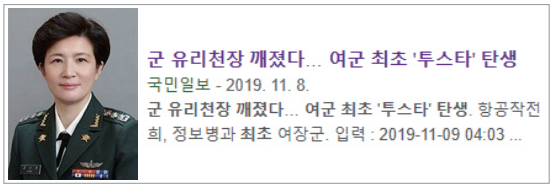
■ 여성 대표성 확대

- 공공부문 여성 임용 확대
  - 정부 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7년)6.5% → ('19년)7.9%
  -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
    ('17년)11.8% → ('19년)21.1%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목표(40%) 초과 달성



- 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 확대

  ※ (사례) 첫 여성 중앙경찰학교장 임명 / 첫 여군 소장(항공작전사령관) 임명



■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 확대('16년 273명 → '19년 304명)
-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경력·학위·자격증 등)

■ 공공부문의 지역 대표성 확대

- 정부 위원회 비수도권 위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 ('18.12) 32.9% → ('19.12) 36.4% / 목표치 상향 조정 : ('22년) 40%→50%

■ 공공부문의 청년 인재 대표성 제고

- 청년 관련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청년기본법」, '20.8월 시행예정)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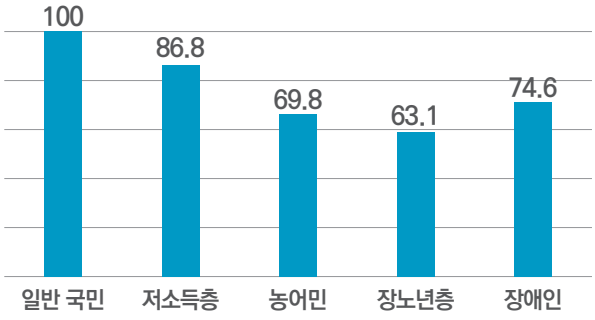
향후 정부혁신 추진방향

Ⅲ 향후 정부혁신 추진방향

1. 국가·사회의 회복력 제고

- 국가와 사회 차원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과제를 재편하고, 범부처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코로나19 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각 분야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 행정의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도 재점검

정보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단위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기준

언택트 사회의 숙제

1. 개인정보 도용 우려
2. 정보취약계층과의 격차 심화
3. 일자리 감소 가속화

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가속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보다 스마트한 업무환경으로 전환 등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높아진 과제의 추진을 가속화



3. 공공데이터와 혁신조달로 '디지털 뉴딜' 지원

-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 지원에 집중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마련 - 5G 네트워크 고도화 - AI 인프라 확충	- 비대면 서비스 확산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 의료·금융·환경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하여 데이터경제·혁신성장 활성화 지원

-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본격 추진을 통해 혁신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형성과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4. 보다 민첩하고 문제해결력 높은 정부로 전환

- 코로나19 대응과정의 교훈을 통해 문제해결력 높은 정부로 변모하기 위한 정부혁신 추진

-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분석하여,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agile)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운영방식 개선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과 협업하는 혁신과제 발굴·추진

참고1 문재인정부 3년 정부혁신 추진경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18.3.19. 정부혁신전략회의)

※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전략) 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② 참여와 협력 ③ 신뢰받는 정부

정부혁신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운영

※ **(근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18.7월)
※ **(추진체계)** 정부혁신 민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18.10월)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민체감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19.2.26. 국무회의)

※ 6대 역점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중점과제, 79개 세부사업 추진

① 새로운 가치를 창출·실현하는 '공공구매조달' 혁신 ②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부운영기반 혁신
③ 선제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④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 기반 구축
⑤ 기관 간·기관 내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강화 ⑥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발표 ('19.10.29. 국무회의)

※ 6대 우선 추진과제

① 대국민 서비스 혁신 ②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③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④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⑤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⑥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20.2.18. 국무회의)

참고2 2020년 정부혁신 비전 체계도

비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목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10위권(~'22)
OECD 정부신뢰도 10위권(~'22)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22)

3대 전략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2020 추진 방향

참여와 협력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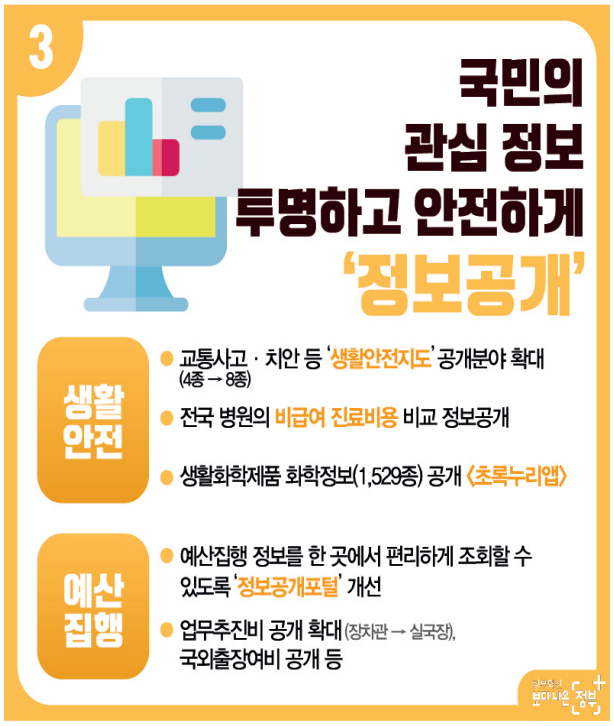
2020 역점 과제

참여	❶ 획기적인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협력	❷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서비스	❸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❹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 및 제공**
	❺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일하는 방식	❻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❽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❾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참고3 카드뉴스로 본 문재인정부 3년 간의 정부혁신 성과









5

믿고 맡겨봐!
때 맞춰 알려줘!!!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출생신고부터 각종 혜택까지, 상속재산도 원스톱으로 조회

14가지 임신지원 서비스 '맘편한 임신'
엽산제 · 철분제,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2020년 6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4종 '온종일 돌봄'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2020년6월)

정부24 손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정부 www.gov.kr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6

민원서비스!
누구나 디지털로!!
'전자문서지갑, 디지털 고지·납부'



자주 쓰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 제출
'전자증명서와 전자지갑'
*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2019년) →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2020년)

국세 · 부가세 신고, 근로자 · 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전국 지방세, 과태료 고지서를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세금 고지·납부'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7

민원은 한곳에서 한방에!
'원스톱 해결'

민원 발급부터 정책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정부24'
* 약 10만건의 정부·민원 서비스 제공 및 3,200건 서비스 신청·발급 가능

민원 종류나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모든 상담이 가능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상담부터 접수와 처리까지 일괄 처리
'시·군·구 인허가 민원 원스톱 창구'
* '17년 157개→ '19년 185개 기초지자체 확대 운영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8

안전과 약자에 대한 관심 곳곳에 더해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안전 어린이 · 노인 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 민식이법, 도심제한속도 60km→ 50km 등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복지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 등

환경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을 통한 대기질 개선
* 종이컵 · 비닐 등 사용 저감,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 등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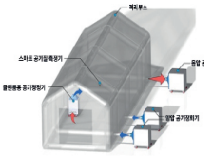
9

와봐~ 도전적 혁신제품 풀(Pool)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기관 물품구매 예산의 1%를 혁신제품으로 의무 구입

혁신장터
혁신기업 · 제품과 구매기관을 매칭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시제품 구매사례



코로나19 선별진료소用 스마트 음압 모듈

정부도신 보다나은 정부

10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빛난 '적극 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운영규정 마련 (2019년 8월)
- 사전 컨설팅 제도 확대

코로나19 적극행정

-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병실 부족 문제 해결
- 진단키트 사용허가 7일만에 승인
- 승차진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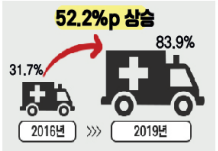
정부도신 보다나은 정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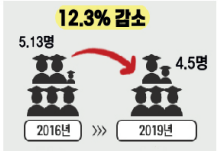


정부, 현장 챙기는 민생공무원 충원
'경찰·소방·복지·교육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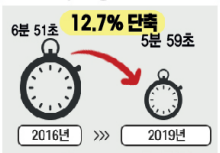
소방 구급차 전문인력 포함 3인 탑승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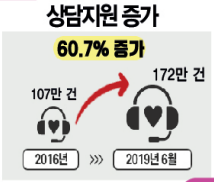
교육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



치안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



복지 찾아가는 복지 상담지원 증가



정부도신 보다나은 정부

12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청년리더를 만날 수 있겠죠?



'여성·청년 대표성 강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UP
1. 여성 고위공무원 : (2017년) 6.5% → (2019년) 7.9%
2. 여성 공공기관 임원 : (2017년) 11.8% → (2019년) 21.1%
3. 여성 정부위원회 위원 : (2019년 6월) 42.6%로 초과달성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유도
* 2018년 기준, 중앙(3.4%), 지자체(3.95%)로 초과 달성

청년정책에 청년참여 강화
'청년기본법'제정 (2020. 8 시행예정)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시 일정 비율 이상 청년으로 구성

정부도신 보다나은 정부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